

# 총선후보 이력 '문재인 청와대' 허용하나...지역정치권 촉각

“정치신인 진입·본선 득표 도움”  
“자질·능력 관계없이 민심 왜곡”  
의견 엇갈려...민주당 결정 고심

민주당이 4·15 총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포함된 경력을 대표 직함으로 사용하게 하느냐 여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를 넘고 있어 각종 여론 조사 결과, 문 대통령 관련 직함을 사용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광주·전남지역 민주당 예비 후보자들은 경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름이 들어간 각종 경력을 대표 직함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당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관련 경력을 사용하느냐를 놓고 찬반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찬성 측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궁극적으로 본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관련 경력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출신의 예비 후보 측 관계자는 “후보자의 대표 직함에서 대통령 명칭이 포함된 이력 사용은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은 물론 본선의 득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본다”며 “거짓 이력도 아니고 6개월 이상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등에서 실제 근무했다면 당연히 대표 직함으로 써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지역 예비후보자들 가운데서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윤영덕 전 행정관(광주 동남구갑) ▲전진숙 전 행정관(광주 북구을)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광주 광산을)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나주·화순)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반대 측에서는 문 대통령 관련 경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경선 자체를 왜곡시킨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또 민주당의 친문(친 문재인) 성향이 짙어지면서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 지역 모 후보는 “지역 특성상 문 대통령 관련 직함이 들어가는 경우,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관계없이 최대 10% 정도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민심과 경선 결과를 왜곡시키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과도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처럼 찬반 의견이 엇갈리면서 민주당의 고심도 깊어가고 있다. 당내 일각에서는 호남 등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지역은 경선에서 대표 직함에 문 대통령 이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구청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출신 예비 후보자들의 경우, 문 대통령 이름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등 호남 지역 민주당 경선에서 문 대통령 이름 사용이 제한될 것인지 주목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이나 일부 정치인들에 대해 대통령 이름을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통상적이지 않아 현실화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예비 후보자의 대표 직함에서 대통령 명칭이 포함된 이력 사용 여부를 놓고서 당 내외에 논란이 큰 상황”이라며 “당내 논의를 거쳐 최종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최경환 당대표(왼쪽 다섯번째)와 의원들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당내에서는 이력에 대통령 이름 사용이 허가될 경우 2018년 지방선거에 준해서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시 청와대 출신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에 한해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등으로, 정부 출신의 경우 차관급 이상에 대해서만 ‘문재인 정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차원에서 민주당 전략기획위는 지역 단위로 세밀한 분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같은 실무 검토를 거쳐 후보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인 다음달 중순께 최종 방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안신당 중앙당 창당대회...“제3세력 통합 나설 것”

현역 8명...원내 5당 자리매김  
신임 대표에 초선 최경환 의원

대안신당이 12일 국회에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대안신당은 소속 현역의원이 모두 8명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새로운보수당에 이어 원내 5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대안신당은 이날 국회에서 창당대회를 가진 뒤 선언문을 통해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철저히 실패하고 있는 기득권 정치, 싸움판 정치를 혁파하고 변화와 희망의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초기 개혁연대를 거부해 정치개혁, 국가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집권여당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국민적 지탄으로 전락한 제1

야당의 책임을 묻고, 그들이 망쳐놓은 정치를 혁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정치적 경쟁체제를 구축하여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로는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이 추대됐다. 최 신임대표는 수락연설을 통해 “조선인 저를 추대한 것은 대안신당부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문을 활짝 열라, 진정한 제3세력을 다시 만들어라,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 힘을 바탕으로 진보개혁 정권의 재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며 “이 순간부터 대안신당은 제3세력 통합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최 신임 대표는 이어 “진보개혁정당의 정치를 주도할 대안신당을 창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권 초기 개혁연대를 거부해 정치개혁, 국가개혁의 소중한 기회를 놓쳐버린 집권여당과 무조건적인 발목잡기로 국민적 지탄으로 전락한 제1

모아야 한다”며 “제3세력 통합 추진을 위한 원탁회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 대표는 이날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현재의 폐쇄적이고 무능한 민주당으로는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기 어렵다”며 “김대중 정신을 토대로 4·15 총선에서 승리해 호남이 중심이 되고 개혁·진보세력이 모두 함께 하는 판을 만들어 4기 민주 정부를 주도적으로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원내대표 및 수석대변인에는 장정숙 의원, 사무총장은 김중희 의원, 정책위 의장은 윤영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당내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는 유성엽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장병완·천정배·박지일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대안신당은 통추위를 공식 창구로 타당 의원들과의 통합 관련 논의의 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문 대통령 내일 신년회견 남북관계 등 해법 주목

오는 14일 이뤄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할 각종 현안 해법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2일 공개 일정을 잡지 않은 채 회견 준비에 매진했으며, 13일에도 수석·보좌관 회의를 생략하고서 예상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미대화 교착 등으로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문 대

통령이 가장 고심하는 문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이번 기자회견에서 북미 대화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깜짝 카드’를 제시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에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북한 대화의 여지를 계속 두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떠한 해법을 제시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내 사안 가운데서는 ‘청와대 vs 검찰’ 갈등 구도와 관련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근 단행된 검찰 인사에 대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총장의 거취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이와 관련한 언급이 회견 도중 나올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거취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신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내놓으리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 추미애, 보좌관에 ‘징계법령 검토’ 문자...윤석열 겨냥한 듯

특별수사팀 구성 권한 제도  
대통령령 등 개정 나설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좌관에게 보낸 사실이 10일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었다.

이 사실은 전남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이 조두현 정책보좌관에게 “지휘감독권한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징계 관련 법령을 찾아놓길 바랍니다”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알려졌다.

추 장관은 전남 이낙연 국무총리로부터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필요한 대

응을 검토하고 실행하라는 지시를 받아 3시간여 뒤 정책보좌관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지만 “그냥 둘 수 없다”고 적은 내용도 있다. 이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관련해 먼저 의견을 내라는 추 장관의 요구에 윤 총장이 불응한 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느냐 따져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여권과 추 장관은 윤 총장의 태도를 ‘항명’으로 규정하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총장 임기는 2년으로 법에 보장되어 있지만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지 않으면 해임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려면 법무부 내 검찰관들을 통한 검찰 지시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검찰 결과 비위 내용이 확인되면 검사징계법

상 해임 등이 가능한데,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다.

추 장관은 이날 검찰이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따로 만들 때 사전 승인을 받으라며 대검찰청에 특별지시도 내렸다. 직접 수사 축소 등 검찰개혁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총장의 수사 재량권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 여권과 청와대들 겨냥한 수사를 탐방했던 검사들이 이번 인사로 곳곳에 흩어지면서 이들을 다시 별도 수사팀에 모아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추 장관이 사전 차단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연합뉴스




맛과 멋이 넘치는  
2020 땅끝해남 설맞이 선물특선

# 선물은 해남미소에서

해남군 직영 농수산물 종합쇼핑몰



해남사랑상품권 가맹점

무료 전화 080-859-1100

www.hnmiso.com NAVER 해남미소 검색

